

# 세계 冷戰體制的 붕괴와 한반도 平和體制的 모색

한 석 지\*

## — 목 차 —

- I. 서 론 : 평화의 의미와 전략
- II.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신국제질서
- III.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환경변화
- IV.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 V. 결 론 :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과 전제

## I. 서 론

### — 평화의 의미와 전략 —

오늘날 세계는 냉전시대를 정리하고 평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반영으로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서조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평화협정을 맺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 사이에도 평화공존 체제가 성립되어 가고 있다.<sup>1)</sup>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야말로 안정된 평화체제가 절실하다는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 신국제질서<sup>2)</sup>와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과연 한반도에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특히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 그 내부질서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반도에는 어떠한 평화전략이 필요한지? 이러한 문제제기는 곧바로 '평화의 의미와 전략'을 궁극하게 한다.

이처럼 평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도 '평화'에 대한 개념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평화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품고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흔히 평화는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쟁의 부재(不在)'로 간주되고 있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ju-do, 690-756, Korea)

1) 동아일보, 1994. 9. 17.

2) 요즘 사용되는 '신국제질서'라는 용어는 16세기 이후 형성된 '근대적 국제정치질서' 전체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1945년 이후 구축되었던 '냉전적 국제질서'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국가들간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화의 파괴는 여러가지 갈등과 대립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는 적어도 세가지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평화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동태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둘째로 평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평화가 목적으로만 간주될 때 '평화를 위한 전쟁'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으며 그 때 평화의 의미는 한층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평화가 실질적이어야 한다. 맹목적인 반전논리(反戰論理)나 감상적 평화주의로는 평화를 구축하지 못한다. 태풍을 뱀불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단순한 전쟁반대의 주장이나 염원만으로는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실질적인 평화는 쌍방의 자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협조적이어야 한다.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 갈통(J. Galtung)의 견해도 있다.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의 부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적극적 평화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배제되고 동시에 자아실현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넓게 이해되고 있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평화접근에 있어 자료나 이론뿐만 아니라 가치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갈통은 유토피아를 하나의 잠재적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두 개념을 구별하고 평화의 유토피아는 폭력이 극소화되고 사회적 정의가 극대화되는 것이며, 디스토피아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sup>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는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한반도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평화를 넓은 의미로 규정할 때 그것은 실현되어야 할 가치를 내포하게 되며 규범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반대로만 규정될 수 없으며 인간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일정한 가치나 목표들과 실질적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구속이나 억압에 의해 살아가는 노예상태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국가나 민족에게도 갈등이나 대립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적극적 평화일 수 없다.

이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평화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크게는 두가지 견해들이 주장된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평화를 내세우는 혁명투쟁이나 해방전쟁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비폭력 수단에 의한 갈등과 대립의 해결을 인정할 뿐이다. 또 다른 견해는 평화를 위

3) John Galtung, *The True Worlds : A Transnational Perspective*, Free Press, 1980, pp. 30~31.

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나 사회변혁에는 폭력이나 전쟁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국투쟁이나 세계혁명을 내세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화전략은 어떤 경우든 평화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폭력에 의해 평화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자체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며,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결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 핵무기의 개발수준을 고려할 때 폭력사용에 의한 평화의 달성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모색도 ‘폭력으로서의 힘(naked force)’의 행사가 아닌 ‘외교정책’에 의한 전략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강대국들이 세계평화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외교정책을 전개했으며, 한반도에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떠한 외교정책들이 가능할 것인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주제의 성격상 기존의 이론과 연구자료의 도움을 빌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 II.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신국제질서

돌이켜보면,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시작된 냉전체제는 전세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 동서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양극화현상을 노정했던 냉전체제는 진영간의 군비경쟁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구성국가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실제로 양대진영간의 세력경쟁은 세계 도처에서 군사적 대치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때로는 국지전(局地戰)의 발생을 초래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각기 그들 진영에 속해있는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대내외적 안정과 안전을 보상해 주며 자주와 독립을 구축했다.

진영간의 관계도 미, 소간의 ‘팽창대 붕쇄’라는 관계속에서 대립했으며 고도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은 ‘공동의 적’이라는 상대개념을 내세워 진영내의 결속과 안전을 위한 조직과 절차의 형성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동구권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코메콘(COMECON)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 : Warsaw Treaty Organization)가 형성되었고, 서방권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이 조직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군사 동맹체제가 출현하였다.

요컨대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체제는 수직적 계층화의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진영을 초월하는 국가들간의 관계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프란(M. A. Kaplan)이 제시한 ‘견고한 양극체계(tight bipolar system)’로 규정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체제에서는 그나마 직접 대립에 의한 세력균형은 유지되었으나 점증하는 군비경쟁으로 인류는 ‘공포의 균형’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4) 신정현, ‘세계평화의 전망과 문제점(3)’, 현대세계의 위기와 평화, 국제평화연구소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83, pp.239~242 참조.

5)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Reprint), Robert E. Krieger Publishing, 1975, pp.43~45.

196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다행히 공포의 양극체제는 점차 다원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원적 체계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미·소의 화해와 미·중의 화해 및 중·소의 대립이라는 강대국간의 국가이익을 위한 행위변화와 유럽 및 일본의 경제부흥, 그리고 제3세계의 등장에 기인했다. 다원성을 내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양극체제와는 다른 다원적 구조를 갖고 데탕트(tetente)라는 새로운 공식을 수반했다. 냉전시대를 지배했던 진영간의 분리와 대결보다는 긴장완화와 협력을 내용으로 한 데탕트원칙이 1970~1980년대의 국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데탕트체제도 평화라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 세계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들간의 관계는 여전히 군사적 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측 모두가 보다 더 유리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양 국가의 세계전략 목표가 서로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탕트 구조는 일정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원래 데탕트 질서가 어떤 도덕적 원칙에 대한 합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나 가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당시 데탕트 질서와 더불어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냉전적 양극체제를 둔화시킨 국가가 동북아에 위치한 중공(현재 중국)과 일본이라는 사실과도 연계된다. 미·소대립과 경쟁에 변화를 촉진시켰던 것은 중공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상승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상해공동성명이 동북아에서도 양극체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동북아에 새로운 양상의 세력균형구조를 가져온 것이다. 이 구조적 변화는 미·소·중·일 4강국의 지위와 이 지역에서의 외교정책변화가 가능한 것이며, 관계면에서 새로운 다극체제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유럽의 세력균형처럼 동질화된 안정체제의 유지와는 달리 긴장을 내포한 과도적인 변질로 특징지어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중·일은 각기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4강국의 관계가 교차되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차원의 세력균형 정책을 구상했고 그 실현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미·중 데탕트에 의해 활발해진 것이다.<sup>6)</sup>

한편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고 미·소·중·일을 4기둥으로 하여 구축된 4강체제 속에서 서로 대립한 채 긴장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반도를 완충으로 한 초강 데탕트구조가 4강체제로 상징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 4강구조는 미·소·중·일이 그들간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기능하고 있었던 '긴장의 부동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치 속에서 4강은 세력균형을 운영방법으로 하고 현상유지를 생활양식으로 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애써 보존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세력균형이라는 가설을 부인하면서도 현상유지라는 현실적 생활양식에 각자의 우방세력과 보조를 맞추며 긴장관계를 계속했다.

4강 구조와 기능과의 관계를 연계해 볼 때 4강구조가 기초로 하고 있는 가설이 세력균형이고

6) 한석지, '1980년대 국제정치체제와 동북아의 세력균형',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연구소총, 제3집, 1985, p. 152.

그 행위기능이 현상유지였지만 사실상의 담보는 '군사적 억지체계(deterrence system)'였던 셈이다. 이러한 억지체계를 전제로 한 데탕트구조가 평화와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안심하는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다. 긴장의 과도적 균형은 데탕트질서의 필요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에 집결된 4강체제가 남북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던 비결도 초강세력이 기능하는 억제력 때문이었다. 초강대국의 억제기능은 핵병기를 포함한 가공할 파괴력으로 이루어지며, 데탕트구조는 이러한 바탕위에 위협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더구나 4강체제는 4강의 국가이익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부적 운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4강과 남북한 관계의 기능양식에 따라 전쟁과 평화는 항상 교차한다.<sup>7)</sup>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데탕트구조 속에서 개별국가들의 관계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 데탕트는 개별국가들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4강은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행동했으며 그들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라 전쟁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지금의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그 동안의 국제질서는 냉전체제가 와해되어가는 과정이긴 했으나, 기존의 주 행위자인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계와 그 하부구조로서 다극화 양상을 보이는 데탕트구조가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데탕트구조는 냉전체제가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과도기에 그나마 소극적 평화의 기능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국제정치질서에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정확히 언제 붕괴되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접어드는 길목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숨가쁘게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은 동구권의 개방과 독일의 통일로 이어졌고, 결국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로 국제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1990년 11월 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간에 체결된 재래식 군대에 대한 협약(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 in Europe)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는 이정표가 되었다.<sup>8)</sup> 40여년 동안 미·소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기능하였던 냉전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양 군사대국간 화해 및 신뢰구축의 과정을 밟아나갔다. 1986년 소련은 미·소 예비정상회담에서 전략핵 및 중거리 핵무기 감축에 대한 태도를 취했다. 동남아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시했으며, 중국과의 국경문제에도 양보자세를 취하여 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했다. 1987년에 이르러 미국도 이러한 소련의 양보와 협력에 '의미있는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서

7) Ibid, pp. 156~157.

8) Robert J. Art, "A Defensible Defence : America'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4, 1991, p. 5.

도 소련의 평화지향적 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은 소련에 대한 군사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협력을 증대시킨다는 신중함을 견지하고 있었다.

1989년에 이르러 소련의 동구자결권 인정에 따라 동구 공산국가들이 개방되었고, 그해 5월에는 중·소 정상회담이 열려 중·소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속되는 소련의 양보로 미국은 봉쇄정책에서 후퇴했다. 미국은 소련을 평화질서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1989년 12월의 말타정상회담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정치협약 기구화, 화학무기 폐기 및 지중해 해군감축, 그리고 독일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990년 10월 소련은 독일통일을 허락하고 통일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잔류하는 것마저 용인했다. 이로써 소련은 초강대국의 위치마저 포기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독일통일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의 잔류허락은 냉전체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다.

1991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유일한 세계초강대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위상은 걸프전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걸프전 당시 국제적 작전을 지휘하던 미국 대통령(부시)이 '신국제질서'라는 용어를 처음 구사했다. UN의 깃발을 들고 미국의 주도하에 침략자를 응징하는 세계적 업무가 과거와는 달리 방해자가 없이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미국은 스스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미국의 포부를 반영하여 '신국제질서'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붕괴에 따른 미국주도의 불가피성을 미리 밝히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탈냉전과 경제관계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력과 다자간국제기구에서의 정치외교적 역량,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평화)의 보편성으로 신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sup>9)</sup>

앞으로 미국은 UN을 앞세워 강대국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세계평화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1992년 UN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나온 '평화계획서(Agenda for Peace)'도 이러한 신국제질서의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계획서는 1992년 1월 UN안보리 정상회담에서 토의된 내용과 UN헌장에 명기된 원칙 및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15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후 1992년 7월 1일자로 유엔총회에 보고되었다.<sup>10)</sup> 소련 붕괴이후 국제정치를 동서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Ⅲ.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반도 환경변화

국제냉전체제의 붕괴는 그 하위체계인 동북아의 국제정치질서에도 변화를 촉진했다. 동북아에

9) Joseph S. Nye, Jr., "Soft Power", Foreign Policy, No.80, 1990, pp.153~171 참조.

10) "신국제질서하에서 UN의 역할: 평화계획서에 대한 분석평가", 한국의 공공정책, 제1집, 한국공공정책학회, 1993, pp.210-212.

있어서 냉전적 긴장의 완화는 결코 동북아 단독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sup>11)</sup>

남한의 동구권을 비롯한 소련과의 수교, 이어서 성공시킨 한·중수교 등은 냉전체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외교정책의 성과들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화해의 움직임이나 최근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변화들이다. 특히 한·중수교는 중국이 북한의 최대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정세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의 북한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던 한국으로서, 중국과의 공식수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책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중요성을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가 중요하다. 줄곧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을 전폭 지원해왔던 중국이 남북한 UN동시가입 지지에 이어, 한반도에 또 다른 합법정부가 존재함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스스로의 자결원칙에 따라 평화공존의 기간을 거쳐 통일을 이룩해야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한·중수교로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하나인 중국과 이제는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정립하여 동북아의 평화질서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한·중수교가 동북아정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잔존하는 냉전체제의 종식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미·일에 대한 관계개선과 남북한관계의 진전에도 도움이 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새로운 평화질서로 전환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넷째, 한·중수교는 그동안 동구권과의 수교로 출발한 북방외교의 성과를 의미하며,<sup>12)</sup> 앞으로 북한개방을 촉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통일의 외교적 기초와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바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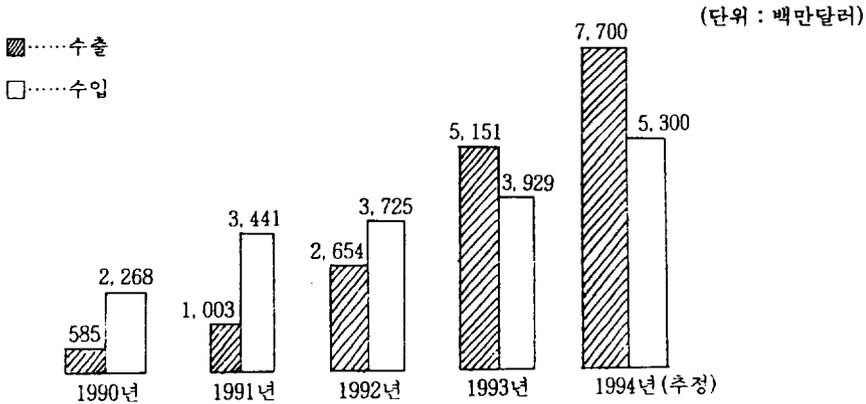
다섯째, 한·중수교로 한국과 중국간에 교역의 증대와 경제협력의 확대는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수교직전인 1991년 44억 4백만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작년 9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1백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참조). 교역액의 증대와 항공 및 해운협정체결 등의 상호협력관계의 확대는 경제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sup>13)</sup>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11)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andom House, 1979, chapter5 참조.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87, p. 392 참조.

12) 중앙일보, 1992. 8. 26.

13)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협력관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림 1> 한·중 교역규모<sup>14)</sup>

※ 1994년 현재, 한국에게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대교역국이고, 중국에게는 한국이 6대교역대상국이다.

여섯째, 한·중수교로 중국내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민족(조선족)이 한국과의 일체감을 갖게 되어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남관계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더불어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과거보다 타협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15)</sup>

결과적으로 한·중수교는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기에 충분했다. 북한에게 변화압력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그 동안 북한을 지원해 주던 중국마저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 냉전기에 보여주었던 수준의 지지는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점차 대외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대내적으로도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북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별 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우선 미국과 일본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어 현재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고, 또한 김정일체제의 정통성확보와 정권유지를 위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여 외교적 고립을 타개해야만 한다. 이 돌파구는 이미 중국에게서 배운 북한의 마지막 선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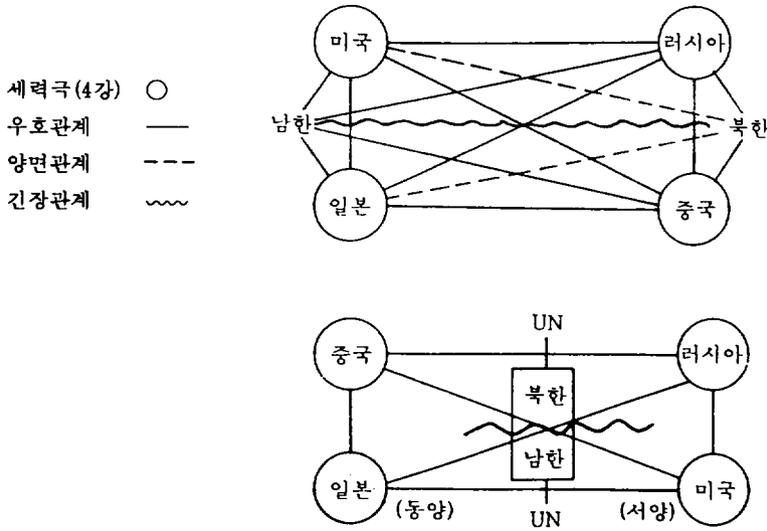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신국제질서에 따른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에 일본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sup>16)</sup>

14) 이 그림은 통관기준이며, 1994년은 중국대사관 추정자료이다. 동아일보, 1994. 8. 24 참조.

15) 유석열, "한·중수교와 북한의 선택", 자유공론, 10월, 자유공론사, 1992, pp. 60-69 참조.

16) 김계동,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가능성과 한계", 국방논집, 제19호, 한국국방연구원, 1992, pp. 32-33.

미국도 과거처럼 세력균형적인 관점에서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핵의혹을 갖고 있는 지역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해소시켜 지역안정과 평화를 꾀하고 싶은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중단하고 개방을 서둘도록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최대현안인 북한의 핵문제만 순조롭게 타결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개선은 급진전 될 것이며, 이것은 남북한 교차승인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림 2〉 한반도의 국제적 환경 (1994년 9월 현재)

#### IV.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신국제질서의 물결이 한반도 주변으로 흐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언제쯤 한반도에는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인가?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예측이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 종식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해결을 뜻하며 아직은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1972년의 '7·4공동성명' 이후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개선의 가능성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이와 같은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최근의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일차적 돌파구로서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교차승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남북한간의

17) 1992년 12월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이 언제 실현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실질적 정치협상과 그에 따른 통일과업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남북한이 전쟁이나 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 상호인정의 전제없이 남북한간의 실질적 협상은 진전되기 어렵다. 따라서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먼저 유도하고 그 여세로 남북한의 상호승인을 실현하는 것이 평화적 차원의 현실적 수준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문제이면서 또한 국제문제라는 양면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균형있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요건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성을 갖는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을 직시할 때, 한반도에 평화체제의 전제 없이 평화통일 논의는 허무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에서 '안보'와 '통일'은 둘 다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 중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개개념이 바로 '평화'이다.<sup>18)</sup>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필요한 접근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 교차승인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중요성을 이와 유사한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확인하자.

### 1. 스칼라피노 (R. A. Scalapino)의 제안<sup>19)</sup>

남북한 교차승인과 UN 동시가입안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스칼라피노 교수였다. 그는 1970년대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전망하는 논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분단국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권하면서 이 대안을 적용하라고 제의했다. 그는 분단국가 문제를 폭력이나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한, 아시아의 전쟁이나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도 이러한 지역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면서, 분단된 쌍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원칙과 상호불가침의 제도로서 규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단 당사국의 통일열망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 화이트 (N. White)의 제안<sup>20)21)</sup>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던 화이트박사가 남북한에 대한 강대국의 교차승인과 이에 따른 남북한

18) 김국진,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집, 제 13호, 한국국방연구원, 1991, p. 37.

19)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Paul Seabury and Arron Wildavsky (eds), U.S. Foreign Proposals for the 1970's, McGraw-Hill Book Co., 1969, pp. 126-145.

20) Nathan White, "Search for Peace: The Four Powers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VI, No. 1, winter 1974-1975, pp. 45-46.

21) Nathan White, "The Necessity for a German Solution to the Korean Problem", Korea & World Affairs, vol. 2, No. 3, 1978, pp. 349-368.

의 UN동시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4단계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제1단계에서 4강은 세계각국의 남북한 동시승인을 유도한다. 제2단계에서는 남북한은 UN과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한다. 제3단계에서는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남북한 정부간의 공식관계 수립을 동시에 추진한다. 제4단계에서 남북한 수도에 쌍방의 대사관을 설치한다.

그의 제안을 검토하면, 그의 일차적 관심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 우선 긴장상태인 남북한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논리다. 그후에 발표한 논문과 저서에서도 남북한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역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이 실현되고 나면, 4강은 모두 남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종결짓고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스스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제안<sup>22)</sup>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4강의 국제협정안을 제시했다. 이 협정안은 그 발상의 기초가 남북한 교차승인 및 UN동시가입안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연구소측은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긴장완화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간에 불가침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협정들을 주변 4강이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협정이 성립되면 '남북한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가 필히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주장이 남북한에 대한 강대국의 교차승인 및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의미한다.

### 4. 키신저(H. A. Kissinger)의 제안<sup>23) 24)</sup>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박사가 두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남북한 교차승인이고, 둘째가 휴전당사자회담이다.

그는 '북한 및 북한의 동맹국들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남한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바로 이 발언은 미국이 남북한 교차승인을 공식정책으로 발표한 최초의 예이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미 1975년 7월 15일 '남북한은 화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으로 우선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이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긴장완화와 남북대화를 위한 외교적 조치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왜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나왔을까?

22) Ralph N. Clough et al.,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rms Control,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chapter. 6.

23) Korea Times, September 24, 1975.

24) ibid., August 14, 1975.

이 때가 국제정치사에 기록된 중대한 전환기였다. 이미 앞장(Ⅱ)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 시기가 냉전의 양극체제를 긴장완화의 데탕트체제로 변화시키던 때이다. 국제조류가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안정의 평화공존의 논리로 바뀌던 시기다. 당시 미국의 닉슨(R. M. Nixon) 행정부는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통해 세계정책 및 아시아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1972년과 1973년 두차례의 미·소정상회담을 통해 미·소데탕트가 성립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미·중데탕트까지 이룩하였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미국은 분단국문제로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싶었다. 강대국간의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긴장지역인 한반도의 새로운 해법을 찾은 것이다. 어쨌든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sup>25)</sup>를 모색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에서는 벽에 부딪혔다. 북한의 적극적 반대와 이를 지지하는 소련<sup>26)</sup>과 중공<sup>27)</sup>의 입장 때문에 당시로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었다. 강대국간의 데탕트에도 불구하고 냉전구조가 엄연히 존재<sup>28)</sup>하고 있었던 한반도에서는 이 제안이 시기상조였던 셈이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 1994년 9월 현재,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1970년대 상황과는 엄청나게 변해 있다. 당시 교차승인의 장애물들이 거의 와해되었거나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며, 반대의 명분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미 남북한은 1991년 UN에 가입했고, 남한은 소련에 이어 중국과도 수교를 이룩했다. 이제 북한도 미국에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오늘의 현실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토대위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은 남북한 관계정상화의 국제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한 협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 V. 결 론

### —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과 전제 —

탈냉전시대의 신국제질서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대립과 긴장으로 점철된 역사를 마무리하고 안정과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과제는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소극적 평화를 시급히 정착하고 그 토대위에서 적극적 평화를 앞당겨야 하는 평화의 이중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남북한간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여 안정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25)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8. p. 12. 제도화란 '조직과 절차의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6) 오늘의 러시아인 당시 소련은 중공이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선언 한 때는 침묵했으나 북한이 중공에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함께 반대했다.

27) 오늘의 중국인 당시 중공은 북한의 반대를 지원하여 남북한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안에 썩기를 박았다.

28) 한·미·일 남방삼각체제와 북·소·중 북방삼각체제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일이며, 그 다음의 적극적인 과정은 소극적 평화의 토대위에서 평화통일을 앞당겨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일이다. 분단상태의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억지 수준의 군사적 안보에만 안주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폭력에 의한 통일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안보'와 '통일'을 연속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개념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개개념을 찾아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발견되는 매개개념이 바로 '평화'이며 그 균형적 돌파구가 우선은 남북한 교차승인이다.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한의 UN동시가입에 이은 4강의 남북 교차승인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군비통제와 상호불가침협정 및 지금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산출하면서 남북간에 평화의 제도화를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관계정상화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킴으로써 한반도 내부의 통일역량 축적에도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의 논문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요약하여 가능성의 근거로 삼겠다.

첫째, 탈냉전을 이룩한 국제조류(國際潮流)가 한반도만을 여전히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신국제질서는 분쟁소지가 있는 지역의 냉전잔재를 해소하며 흐르고 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 차원에서 교차승인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던 남북한 UN가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이것은 한반도 내외에 교차승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차승인을 반대했으며 교차승인의 주행위자인 소련과 중국이 결국 한국정부와 공식 수교함으로써 교차승인의 절반은 벌써 이루어 놓은 상태다.

넷째, 최후의 걸림돌인 북한도 이제는 더이상 교차승인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스스로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아직도 북한의 핵문제와 경직된 태도를 걱정하며 가능성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전망에서 보면 기우일 것이다.

첫째,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경직된 태도를 보일 것이나, 제한적 핵사찰을 받아들이며 타협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경제적 보상을 확약받기 위해 핵보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은 구사할 것이다.

둘째, 결국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국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체제위협을 느끼는 제안을 수용치 않을 것이나, 실리적 차원에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는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다.

넷째, 미국도 북한의 핵위협이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면 북한의 핵의혹이 존재하더라도 핵동결을 전제로 일단은 북한을 수용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제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에 이르면 우선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지면서 미·일·중·러 4강이 마치 교직(交織)하듯 남북한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교차승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질서를 더욱 안정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한반도는 비로소 1민족 2국가의 평화체제로 제도화 되면서 일단 소극적 평화를 확보하게 된다.

이제 이쯤에서 독일통일의 과정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1970년대 초 양독간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내외적 조건을 축적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은 UN가입과 함께 미·소·영·불과 교차승인을 이룩함으로써 두개의 국가로 병존했다. 별개의 국가로 활동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내부적 성숙을 계속 꾀하다가 만난 외부적 상황변화(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 등)를 놓치지 않고 결국 통일과업을 달성했다. 이 사례는 남북한 UN가입이나 교차승인이 결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에도 동서독 통일의 토대가 됐던 이른바 '2+4방식'이 계속 적용될지 모른다. 교차승인후의 한반도문제는 남북한과 미·일·중·러의 '2+4새질서'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동북아를 새롭게 규율하는 과도적틀은 '대립'보다는 '경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경쟁은 북한을 보다 개방된 체제로 바꾸기 위한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노력,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빼내서 보다 독립적인 당사자로 만들려는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의 노력이 부딪치는 양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경쟁적 참여도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소극적 평화의 토대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는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선은 한국정부에 몇가지 부탁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한국정부는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통일한국의 대외관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능동적인 북한포용정책과 4강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4강의 최근 정책과 관련 한국의 외교적 대응과 과제는 통일한국이 분단한국보다 그들의 국익이나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할 것임을 설득하여, 그들이 능동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분단하여 지배한다'는 과거의 냉전정책을 말끔히 씻고 '하나의 한국'을 위한 미래의 정책을 준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셋째, 냉전시대 4강의 한반도정책과 지금 탈냉전시대의 한반도정책이 일치하리라는 일방적인 기대도 곤란하다. 특히 한국의 당국자들이 아직도 냉전의 논리와 탈냉전의 논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미국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짝사랑에 그칠 것이다. 입장차이를 보일 때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규탄하기 보다는 우리의 중장기적 통일정책 구도에 체계적으로 접합시켜 나가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넷째,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내적 차원, 남북한관계의 차원, 국제적 차원 등 3차원에 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한다.<sup>29)</sup> 이산가족 및 남북자 송환 등의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경제 교류는 남북경쟁과 홍보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장기적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도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새 지도층이 체제 안정을 기하는 정권교체 초기에 성사시키는 것이 상호신뢰구축과 북한의 정확한 의사 파악을 위해서 유리할 것이다.

다섯째, 요즘 한국정부의 외교위기론<sup>30)</sup>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여론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내정(內政)과 외교(外交)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국민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외교능력은 국력의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이익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sup>31)</sup>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부는 핵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실제 현실간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진지하고도 솔직한 노력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제는 평화통일의 가능성도 탈냉전 시대에 걸맞는 시각변화와 외교정책의 변화속에서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국진,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통일", 제 13호, 한국국방연구원, 1991.
- 김계동,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가능성과 한계", 국방논집, 제19호, 한국국방연구원, 1992.
-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87.
- 신정현, "세계평화의 전망과 문제점(3)", 현대세계의 위기와 평화, 국제평화연구소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83.
- 유석열, "한·중수교와 북한의 선택", 자유공론, 10월, 자유공론사, 1992.
- 조재관, 국제정치학, 법문사, 1981.
- 한석지, '1980년대 국제정치체제와 동북아의 세력균형',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연구논총, 제3집, 1985.
- 현종민, "신국제질서하에서 UN의 역할: 평화계획서에 대한 분석평가", 한국의 공공정책, 제1집, 한국공공정책학회, 1993.
-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Alfred. A. Knopf, 1973.
- John Galtung, The True Worl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Free Press, 1980.
- Joseph S. Nye, Jr. "Soft Power", Foreign Policy, No. 80, 1990.
-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andom House, 1979.
- Mortor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Reprint), R. E. Krieger

29) 조재관, 국제정치학, 법문사, 1981, p. 45.

30) 동아일보, 1994, 9, 16.

31)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Alfred. A. Knopf, 1973, pp. 140-144.

Publishing Co., 1975.

Nathan White, "Search for Peace : The Four Powers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 , No.1, 1978.

Nathan White, "The Necessity for a German Solution to the Korean Problem".  
Korea & world Affairs, vol.2, No.3, 1978.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Paul Seabury and Arron  
Widavsky(eds), U. S. Foreign Proposals for the 1970's, McGraw-Hill Book Co., 1969.

Robert J. Art, "A Defensible Defence : America'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15, No.4, 1991.

Ralph N. Clough et al.,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rms Control,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New haven, Yale Univ.Press,  
1968.

## Summary

# The Breakdown of the World's the Cold war System and Groping for the System of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Han Seok-Ji*

Now, the world finish the period of the cold war, emphasize the peace of the world and grope for a new international order.

According to these the shift of an international situation, Korean Peninsula confront with a difficult matter which it must cope with positively. When we view it from the peace's standpoint, this matter can be called the double subject of the peace that make us settle down a passive peace and carry up active peace on the basis of that.

Therefore, most of all, to solve these subjects, we must dissolve troubles and tensions in Korean Peninsula and will have to adopt the systematic method for the system of the peace which can construct the stability and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econd, active subject that we should solve is to establish a nation's prosperity, after carrying up the peace-unification on the basis of a passive peace.

From now on, Korean Peninsula in the situation of partion couldn't lead a comfortable life with the military's security alone in the level of the war-resistant, for all that, Korean Peninsula cannot seek after the unificaion through force recklessly. Hence, after we set up the continual concept of the security and unification, without sacrificing which thing in the middle term that we can approach two's concept succesivly. At this time, the middle concept that we look for is the very peace, and the balanced breakthrough is the cross-recogn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the Four Powers(USA, USSR, China, Japan). The cross-recognit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set up the system of the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will contribute toward the settlement of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ddition, by opera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foundation of that, it will also affect the accumulation of the unification-capacity.

Consequently, these courses will be an essential element that will carry up th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